

국민의힘 “靑 백신 정치화 중단? 백신 무능부터 중단”

주호영 “백신 문제는 세계 각국 모두 대통령 일”

김기현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이 백신 아닌가”

국민의힘은 23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부족을 문제 삼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야당과 일부 언론보도에 청와대와 여권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반박하자 “백신 무능부터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일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벌써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얼마의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전혀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며 “이런 점을 지적하는 야당과 언론, 전문가 발언을 국민 불안 조성한다고 자꾸 도로 나무라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대통령 일로 돼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백신 확보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신 물량 계약이 거의 끝난 9월에 와서야 대통령이 백신을 확보하라고 말했고, 이제와서 확보가 안 됐다고 짜증났다는 보도를 보고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니까 중요사건마다 내로 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으로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강준만 교수로부터 혹평을 받는 것 아니냐”며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간 선조나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남쪽으로 간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자 책임 방기의 대표적 예다. 이런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그간 ‘대통령의 백신 확보’ 발언을

공개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어이가 없다.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이 백신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앞으로 언제 백신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조차도 모르 채 커다란 공포에 빠져있다”며 “백신에 신경쓰라고 몇마디 말을 하 기만 하면 책무를 다한 것이냐”고 따졌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백신 확보를 주문했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정작 백신 구입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논란이 일었다.

김미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올 4월부터 13차례나 백신확보 하라고 했었는데, 왜 당초 정부 내년 예산안에는 백신구입비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고 썼다.

또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방역의 성공이라고 하려면 정부는 정부 할 일을 해야 된다”며 “코로나를 종식 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정해져야 되

는데 그거는 백신 확보 및 접종이 신속해야 되고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애당초 백신 구매 및 접종 위한 별도의 예산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그토록 백신이 중요하다고 채근했다면, 왜 정부예산안에 백신구매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건가? 내년 정부 예산안만 봐도 정부가 백신 구매와 접종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들의 자발적 희생과 의료관계자의 헌신적 노력에 기인한 K-방역이 대통령 자신의 지적이라며 공치사 홍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진실이잖나”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K방역 자만심에, 국내 개발 K바이오 환상에, 백신보다 치료제 우선한 전략미스에 문대통령은 백신무능, 백신후진국을 만들어 버렸다”며 “야당이 백신확보 요구하는



게 ‘백신의 정치화’인가? 정부의 백신 무능을 따지고 질책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백신 헛소리 말고 백신 무능부터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또 “문 대통령 발언기록까지 시간대로 공개하는 청와대, 세월호 이후 대통령 행적을 시간대로 추궁했던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은 쫓붙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통령의 ‘해의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도 11월 하순에야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와 여당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참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진성준 ‘1가구 1주택’법 논란...이낙연 “발의 전 협의하길”

“사회주의·공산주의나” 파장 일파만파 커지는 것 경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들이 민감한 법안을 발의하기 전 당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할 때 당과 상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감을 이뤘다”며 “(법안 발의 전)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많이 이뤘다”고 전했다. 해당 발언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의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 거주·보유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이 발의된 후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법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원 원내대표가 먼저 법안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기국회 때도 “법안 발의 때 사회적 정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 등은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가 이 같이 언급하자 이낙연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하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 참석자는 “민감한 주택 정책이나 다른 민감한 정책들은 법안 발의 전에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말

한 것”이라며 “(발의) 의도가 곡해될 여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참석자는 “실제로 당헌·당규상에 법안 발의 전 정책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소지가 있어서 거의 적용을 안 했다”며 “그런 취지를 다시 한 번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의원들의 법안 발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당의 정책 방향과 관련돼 문제나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며 “의총 등에서 의논해보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진 의원이 낸 법안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다들 이심전심으로 (알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가 쉽다. 그 법안을 보고 취지는 알겠는데 논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금태섭 “반문이라고 극단 세력까지 다 합쳐선 안 돼”

내년 보궐선거에서 야권 서울시 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23일 야권연대와 관련, “소위 말하는 정말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반문(反문재인)으로 다 합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야권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도 5.18과 관련해서 광주 사과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다. 사실은 집권세력 측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야당도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연대에서 태극기부대

등 극단적 보수세력 제외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또 “지금은 집권세력을 견제해야 된다”며 “국민의힘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역동적인 초선의원들도 많고 지금 제1야당으로서 가장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은 맞으니까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견제에 나서서 것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중심의 연대를 시사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지를 여론조사에 있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어차피 정치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